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변화 분석: 2023년 동향과 2024년 전망

김진하 |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buddhakim2003@naver.com

I. 들어가며

본고는 북한 김정은 정권 대남정책의 2023년도 동향 분석과 2024년 전망을 위해 작성되었다.¹⁾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대남정책의 전략적 기조는 다음의 뚜렷한 두 가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대남정책의 군사 전략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대남전략의 주목표로서 소위 ‘남조선혁명’과 ‘통일전선’ 구축,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협상을 통한 연방제 통일’이라는 북한식 평화 통일 방식보다²⁾ 핵무력 등 강력한 군사력에 의존하는 ‘령토완정’이 강조되고 있다. 급기야 김정은은 2023년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민족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적대국간 관계, 즉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접근하겠다고 선언한다.³⁾ 대남전략을 한국의 군사적 평정을 위한 전략적인 방책으로서 재편하겠다는 뜻이다. 이하에서는 2020년 제8차 당대회 이후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 북한 ‘대남정책의 군사 전략화’ 경향을 ‘군사화’라고 칭한다.

둘째, 대남정책을 대외전략의 하위 종속변수로 취급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신냉전 대립 구도에 편승하는 대외전략 기조에 맞추어 대남전략을 기획·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은 적대 진영에 속한 교전 국가이므로 대남전략은 대외적 투쟁의 여러 방안 중 하나가

1) 이 기고문은 통일연구원,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통일노선 전환 분석: 전략적 함의와 대책」(통일연구원 수시과제 보고서)의 저자 작성 부분을 재구성한 글입니다.
2) 김진하, 「북한의 '핵위기·평화협정 연계전략'과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 한미 반(反)북핵 독트린(Doctrine)을 재안하며」, 『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pp.301~343.
3)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 12. 31.

일 방법론이 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국제 정세와 대외전략을 대남정책에 연계시키는 ‘국제화’ 경향이라 부르기로 한다. 북한이 신냉전 기류에 편승하면서 국제화 추세는 대남전략의 군사화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갈등과 대립의 국제 정세 때문이다.

대남전략의 군사화 및 국제화 경향은 상당 기간 상수(常數)적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 핵무력의 고도화로 북한의 대외적 자신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 신냉전 대결 구도도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대남전략 전환 추세에 국제 정세 및 한국 내 정치 지형 변동에 대한 북한의 예상이 대입되면서 향후 북한 대남정책의 기초가 결정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전략 결정 방식에 대한 가정을 적용하여 북한 대남정책의 2023년도 동향 분석과 2024년도 전망을 진행한다.

II. 대남전략의 기초 변화

북한 대남전략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자. 첫째, ‘군사화’ 경향이다. ‘한반도 현상 질서 변경,’ 즉 중국적으로 ‘북한 주도 흡수 통일’은 정권 창립 이래 대를 이어가며 일관되게 추구되어온 체제의 최상위 목표이자 대남전략의 존재 이유였다. 김정은도 2016년 개최된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며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시키겠다고 맹세한 바 있다.⁴⁾

전통적으로 북한은 양대 방법론으로 통일전선 구축과 연방제 협상을 경유하는 ‘평화적 통일’과 무력을 동원한 ‘비평화적 통일’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 ‘전쟁의 참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며 ‘평화적 통일의 유일한 방안인 연방제 통일’을 강요하던 김정은 정권은⁵⁾ 최근 들어 무력에 의한 한반도 평정, 즉 소위 ‘령토완정’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남전략의 핵심 목표도 무력에 의한 한반도 현상 변경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다.

북한식 삼전(三戰)전략 중 ‘법률전⁶⁾’의 일환으로 김정은 정권은 ‘강위력한’ 군사력에 기초한 무력 평정 원칙을 법제화해 왔다. 2021년 개정 <당규약> 서문에서 기존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 부분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위협들을 제압”이라는 문구로 변경되었다. 당 최고 준칙으로서 ‘남조선혁명’과 민족통일전선 구축보다 무력 병탄을

4) 「노동신문」,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2016. 5. 8.

5) Ibid.

6) 중국공산당은 정면 대결로 이기기 힘든 적을 대상으로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즉 삼전을 전개하며 세력을 확대하면서 적을 위축시키고 포위하는 중국 특유의 복합전(Hybrid Warfare)을 구사해 왔다.

보다 현실성 높은 대안으로 강조한 것이다. 2022년 ‘핵 선제공격 권리를 주장하며 확장적이며 공세적인 핵교리를 채택’한⁷⁾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⁸⁾ 그리고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개정된 <개정헌법>에까지 ‘령토완정’을 조문화하였다.⁹⁾ 1948년 김일성이 정부 정강 첫째 항에서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을¹⁰⁾ 주창하던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¹¹⁾

2022년 말 열린 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더니,¹²⁾ 급기야 지난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5일차 회의에서 한국과는 교전관계에 있으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¹³⁾ 박차를 가하겠다고 남북관계 전시화(戰時化)를 선언하였다. 이에 더해 핵 선제공격 권한을 한국을 대상으로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이번 김정은의 대남정책 군사화 선언을 돌발적인 급변으로 보기는 어렵다. 북한은 외교조차 간지기에 행해지는 ‘평화적 전투’로 인식하는¹⁴⁾ 레닌주의의 오랜 전통을 따르고 있었으며, 김일성도 협상을 “적을 날카롭게 공격해서 적을 궁지에 몰아넣는 혁명의 적극적인 지류적 공격형태”라고¹⁵⁾ 교시한 바 있다. 놀라운 점은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노골적 속내를 드러낸 일이다. ‘남조선혁명’과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기도비닉(企圖秘匿)조차 포기할 정도로, 장기전 수행이 필요한 대남혁명노선의 지속적인 추진은 더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듯 보이며, 다른 한편 이는 김정은의 군사적 자신감이 커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인 방법 중 <평화적인(?) 연방제 통일>을 강요하던 2016년 제7차 당대회의 김정은과 ‘새로운 길’ 핵무력 고도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군사적 방법을 강조하는 2021년 제8차 당대회의 김정은 사이에는 2017년 말 <핵무력 완성 선언>과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사태가 있었다. 핵무력 완성과 고도화, 국제사회 대북 비핵화 조치의 한계 노정, 중국의 강력한 현상질서 도전과 러시아의 강대국 정치 복귀로 심화하고 있는 신냉전 갈등 구도, 그리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 약화와 상대적 국력 감퇴에 힘입어 김정은이 자신감을 획득한

7) 전봉근,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2022-28, 2022.

8) 『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2022. 9. 9.

9)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2023. 9. 28.

10)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김한길, 『현대조선력사』, 서울: 일송정, 1983, p.286.

11) 김일성의 ‘국토완정’론은 결국 한국전쟁 참공으로 귀결되었다.

12)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 1. 1.

13)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 12. 31.

14) 레닌은 평화 시에도, “무장투쟁의 필요성이 한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경고한다(V.I. Lenin, “Report on the Tactics of the R.C.P. (July 5, 1921),” Third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June 22-July 12, 1921,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21/jun/12.html>, 검색일: 2024. 1. 1).

15) 김일성의 “9.25 전투명령(1972. 9. 25)” 중의 주장으로 다음에서 재인용, 김부성, 『내가 판 땅굴』, 서울: 갑자문화사, 1976, pp.59-60.

모습이다.

대남 무력 병탄 노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인지 김정은 정권은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특히 핵무력 고도화 프로그램을 강행 추진하며 핵무력 대량생산화·고도화·정밀화·다종화·실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¹⁶⁾ 핵무력 고도화가 대남전략 군사화를 촉진한다는 가정이 유효하다면, 고도화가 진전될수록 대남전략 군사화 경향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핵무력 고도화는 김정은을 고무하여 더욱 위태로운 형태의 대남전략을 구사하도록 추동할 것으로 보인다.¹⁷⁾ 북한 대남전략의 군사화는 신규 핵무장 국가의 대외정책 ‘대담화(emboldenment)’ 현상에 관한 벨(Mark S. Bell)의 경험적 사례 연구 결과와도¹⁸⁾ 부합한다. 즉, 북한 핵무력의 확대가 북한이 공세적, 군사적 대남전략을 추진할 물리적 배경인 것이다.

둘째, ‘국제화’ 추세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대남정책을 신냉전 대립 구도에 편승하려는 북한 대외전략의 큰 틀에 연계하여 재단하는 경향을 말한다. 김정은 정권은 이미 미·러, 미·중 간 갈등 구도의 심화, 현상 변경을 노리는 북중러 북방 수정주의 동맹의 결속과 한미일 자유주의 삼각 동맹의 재결집을 신냉전의 전개라며 거듭 강조해 왔다. 국제적 갈등 참여화를 반기는 모습이다. 대립과 갈등의 대결적 강대국 정치가 구조화, 진영화될수록, 이에 편승(bandwagoning)하여 고립과 포위에서 벗어나 생존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반도 현상 질서 변경을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대남전략 역시 한국을 혁명의 대상이자 남북 분단의 특수성에 방점을 두며 접근하기보다는 현상 유지 동맹세력의 ‘취약고리’로서 인식하는 모양새다.¹⁹⁾

2023년 연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대남대적부문의 기구들을 폐지 및 정리하고 근본적인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하라며 대남부문 기구들의 정리를 지시했는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최선희 외무상의 주재로 통일전선부장 리선권 등 대남 사업부문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협의회가 열려 ‘관련 단체들을 정리’하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을²⁰⁾ 진행한 바 있다.²¹⁾ 북한 대남업무 조직 및 기구의 총정리·개편 작업이 바로 외무성 주도로 추진되는 모습은 대남전략 국제화 추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16) 『노동신문』,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2021. 1. 9.

17) Scott D. Sagan, “Armed and Dangerous: When Dictators Get the Bomb,” *Foreign Affairs*, Vol.97, 2018, pp.35-43.

18) 벨의 연구에 따르면, 신규 핵무장 국가는 이전보다 더욱 공격적, 팽창적, 독립적, 그리고 동맹국들의 공세적 대외행태를 복돋우는 담대한 대외전략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Mark S. Bell, “Beyond Emboldenment: How Acquiring Nuclear Weapons Can Chang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40, No.1, July 2015, pp.87-119).

19) 이런 점에서 북한 지도부에 의한 ‘대한민국’ 지칭은 한국을 객체화된 적대국으로 취급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남조선 호칭에 비하여도 오히려 적개심이나 적대감이 상향된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0) 『조선중앙통신』, op. cit, 2024. 1. 16.

21) 『조선중앙통신』, 「최선희 외무상 대적부문 일군들과 협의회 진행」, 2024. 1. 1.

사태다.²²⁾

대남전략의 대외전략 종속화로 인해 대남전략의 향후 진행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북한 대외전략 최근 기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정권의 신냉전 편승 외교전략은 두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진영결집 외교’다. 북한은 반미 국제연대 선봉장을 자임하면서 미국 주도 자유주의 현상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수정주의 도전 세력들 간 보이지 않는 협조 관계를 공고한 진영으로 결집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하노이회담의 실패로 직접 담판을 통해 핵무장의 기정사실화와 한반도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던 북한의 유화 공세는 좌절되었다. 국제질서와 동맹 관계 복원, 그리고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미 바이든 정부의 등장으로 더욱 난관에 봉착한 김정은 정권이다.

이에 북한은 체제 대결 양상으로 구조화되기 시작한 미·중, 미·러 대립에 편승하면서 갈등의 국제정치를 악용하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김정은은 “미국이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 군사동맹 체제 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흥체를 드러냈다”며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나갈 것”을 천명한다.²³⁾ 신냉전적 대결 심화와 갈등 증폭에 주도적으로 나서며 북한의 전략적 선택권과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출한 것이다.

진영 결속을 추진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분명하다. 중·러의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확보하여 대북 국제제재의 완결성을 훼손하고 만성적 경제난과 식량난을 버텨낼 동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중·북 무역과 러시아로부터의 지원 물자 유입이 증대되는 추세가 가속되고 있으며,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중·러는 북한의 핵무력 증대와 제재 위반 행위를 옹호하며 추가 제재를 가로막고 있다. 중·러와의 군사적 결착과 외교적 공조를 통해 한미일 등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를 향한 연대와 압박에 대항하고, 오히려 대미·대남 강압 전술을 안전하게 구사하면서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동맹 연루(entrapment)’²⁴⁾ 전략의 적극적 구사다. 신냉전적 대결 구도 심화와 중·러와의 진영 결속을 토대로 강대 동맹국들의 군사·외교적 관여와 개입을 한반도 지정학 게임에 끌어들이어 활용하는 ‘북한다운’ 대외전략이다.

22) 『동아일보』, 「北, 김정은 「대남기구 정리」 지시따라 통일전선부 통폐합 수순」, 2024. 1. 13.

23)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2023. 9. 28.

24)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36, No.4, July 1984, pp.461-495.

중·러 등 강대 후원국과의 힘의 격차로 북한은 비대칭 동맹 관계의 열세한 위치에 놓여 있다. 자칫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러의 동북아전략에 휘말려 들어갈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다. 동북아에서 미·일과 대치 중인 중·러는 북한 이외에 뚜렷한 대체 동맹국을 찾기 어렵다. 북한의 이탈이나 실함은 중·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전략적 손실이다. 김정은은 이러한 지정학적 입지를 십분 활용해 오히려 주동적으로 중·러 강대국들을 자신에 유익한 방향으로 한반도 문제에 연루시키고 있다. 대미·대남 도발의 강압 효과를 증대시키고, 핵위협과 위기 고조(crisis escalation) 벼랑끝전술의 위력을 배가하려는 위험한 의도가 읽힌다. 중·러의 힘을 배경으로 한반도 열전(熱戰)화를 노리는 것이다.

2023년 북한은 러시아를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눈부신(?) 연루 전략을 선보인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진행되면서 군수품 조달 문제로 곤란에 처한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하면서 한반도 국제정치에 연루시켜 핵무력 고도화 진척 및 대미·대남 압박에 활용하였다.

전략적 상황에 따라 대미 갈등 수위를 신중히 조절해 나가길 원하는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진영 결속과 연루 전술 구사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급속한 군사 밀착을 통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중국을 간접적으로 질타하는 이중 포석도 구사한 셈이다. 곤경에 처한 러시아의 상황을 활용하여 인공위성 제조 및 발사,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정밀 SLBM 개발 등에 필요한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데 유리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다. 2023년 11월 21일 발사된 인공위성 ‘만리경-1호’는 저고도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 기술진의 밀착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러 간 군사기술 이전 및 공조 밀약이 이미 가동되는 정황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다.

다음에서 대남전략 군사화 및 국제화 추세가 2024년 대남전략 결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III. 2023년 동향과 2024년 전망

북한 대남정책의 군사화, 그리고 대외전략과의 연계전략은 이미 지속력 있는 중장기 추세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2023년 북한의 대남정책은 핵무장 고도화 강행과 미사일 도발 등을 통한 대미·대남 군사적 강압 확대, 그리고 활발한 침투 및 영향력 공작을 통한 남남갈등 심화와 보수 정부 무력화 시도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 대화 재개를 거부한 채, 중·러와의

연대를 통해 <강-대-강> 대결 노선을 국제화하는 노력이 더해졌다. 다시 말해, 한국을 적대적으로 객체화하는 대남전략의 군사화 및 국제화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2023년 북한은 핵위협과 긴장 고조 전략을 견지했다. 현재의 한미동맹을 상대로는 비핵화 문제 등에 관한 유리한 협상을 전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듯하다. 비록 한미동맹을 상대로 극단적 대처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초대형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미국의 대화 제의를 연이어 거부하며 중·러와의 군사·외교적 공조를 강화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시하는 크고 작은 도발 행위를 결행하며 대남·대미 강압 태세를 고수했다. 핵어뢰 ‘해일’과 북한식 SLBM 탑재 SSBN 도입, 무인기 정밀화, 고체 연료 추진 ICBM 화성-18형 발사실험, 해상 또는 해중(海中) 발사 순항미사일 (SLCM) 개발 등 핵무력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했다.

김정은은 미국이 ‘핵협의 그루빠를 가동시킨 데 기초하여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면서 ‘핵전쟁 위협을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난하며²⁵⁾ 핵무력 고도화의 정당성을 강변하였다. 9월 26일에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올해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 안보 정세가 핵전쟁 문턱에 보다 가깝게 다가선 위험천만한 해’였으며 ‘핵전쟁 참화’를 운운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의 험박성 언급도 책임을 한미동맹에 돌리며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발언이다.²⁶⁾

대남정책을 대남 군사전략의 하위 요소로 취급하는 군사주의 기조도 더욱 강화되었다. 김정은은 2023년 연말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에 따라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여 ‘근본적으로 투쟁 원칙과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한다. 이는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강구”해 나가겠다고 대남전략의 핵심 목표를 남조선혁명이나 연방제 통일을 향한 통일전선 구축이 아니라 군사적 정복에 유리한 환경, 즉 한국 내 갈등 증폭, 국론 분열, 그리고 국가 기능 마비 상황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적·제도적 개편을 단행하겠다는 뜻이다.

김정은의 결심은 회색지대에서 벌어지는 진짜 전쟁 개시 전 수행되는 작업이 ‘정치책략전’

25)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2023. 9. 28.

26) Ted Anthony, “At UN, North Korea Says the US Made 2023 More Dangerous and Accuses It of Fomenting an Asian NATO,” AP, September 27, 2023.

또는 ‘현대 하이브리드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을 암시한다. 러시아의 조지아 남오세티아 민족 분규 유발 및 2008년 침공, 우크라이나 돈바스 내란 촉발 및 2014년 크림반도 점령 등은 본보기 사례가 되어 줄 것이다.²⁷⁾

2023년 북한 통전부 문화교류국 요원들의 침투와 포섭 활동으로 결성된 대남 공작조들이 잇따라 적발되었다. 한국 정치·사회 부문에 대한 침투와 영향력 공작의 강도를 높여 가며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 하락과 대중 소요 발생을 유도하는 공작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북한판 대남 하이브리드전은 사실상 이미 개시된 것이다. 중국적인 목표는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의 결정적 시기에 필요한 한국 내부에서의 혼란과 대결의 극한 정치 상황 발생, 한국 정부의 국가 기능 마비와 붕괴, 그리고 사이버 공작 등을 통한 경제적 대혼란 촉발 등을 준비하는 것이다.

2024년 전망에는 연말 전원회의에서 힘주어 강조한 바 있듯, 북한 대남정책의 군사화 및 국제화 추세가 강화될 것이다. 4년 차를 맞이하여 핵무력 고도화 계획은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신냉전의 국제 대립 구도가 거칠게 전개되면서 북한 대남전략의 군사화는 위험 수위에 근접하게 될 것이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김정은 정권은 “강대국, 정면승부의 대미 대적 투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정책을 실시”하여²⁸⁾ 한반도 위기를 의도적으로 생산해 내는 전쟁 비즈니스에 나설 것이다.

또한 진영 결집 외교를 거세게 전개하며, 중·러를 자신들의 한반도 현상 변경 프로젝트에 끌어들이며 평양의 이해 관철에 활용하는 연루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것이다. 한국을 적대 진영의 최전선에 위치한 적대적 객체이자 공략 가능한 약체로 부단히 각인시키며 북중러 대륙 삼각 동맹의 결속을 더욱 활성화하는 가속기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북·러 간 군사적 밀착은 선을 넘는 위험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미 전쟁 중인 러시아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동북아 전선에서도 대미 압박에 도전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동에 이은 동북아에서의 분쟁 또는 위기 상황 발생은 미국의 힘을 더욱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난하며 대만 등과 더불어 한반도를 2024년의 분쟁 위험 지역으로 지적한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공개 경고를 마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다.²⁹⁾ 라브로프는 이미 지난해 10월 방북하여 ‘쌍무적관계’ 확대를 김정은과 논의하였고, 최선희 외무상과의

27) Kent DeBenedictis, *Russian "Hybrid Warfare" and the Annexation of Crimea: The Modern Application of Soviet Political Warfare*, London: I.B. Tauris, 2022, pp.31-54.

28)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 12. 31.

29)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s Interview with TASS News Agency," December 28, 2023, https://mid.ru/en/foreign_policy/news/1923539/, 검색일: 2023. 12. 31.

회담에서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정세’에 대한 공동행동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반미 공동 전선 구축에도 합의하였다. 대남·대미 압박에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대남전략의 군사화 및 국제화 경향은 거의 상수다. 2024년도 국제 정세 및 한국 내 정치 지형 변동 가능성은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 정세는 우크라이나전 장기화 및 중동 가자 전쟁 확산 양상으로 갈등이 증폭되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대리전 모습을 띠고 있긴 하지만, 양면 전선에서의 관여와 자원 투입으로 미국은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국내적 반대 여론 형성은 덤이다. 지쳐 가는 패권 국가 미국의 국제 질서 유지 능력 저하와 외교적 영향력 약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공백을 파고드는 수정주의 세력, 북·중·러·이란 등의 도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 정세 전개 상황을 한반도 위기 고조 전략을 구사하며 전략적으로 활용하려 들 것이다. 미국의 피로감을 가중하는 것이다. 양안에서의 갈등 증폭에 따라서는 중국 역시 보다 강경해진 대미 도전 태세를 선보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을 추동하여 한반도 위기 상황을 의도적 유인할 수도 있다.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의 동시적 위기 발생은 미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³⁰⁾

북한의 초강경 대남 공세를 촉발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요소는 바로 선거 달력이다. 북한은 현상 유지 선호 진영 각국의 주요 선거 일정, 특히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에 맞춰 모험주의적 외교 행보와 군사 도발로 한반도 정세 위기 극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위기 고조용 대형 군사 도발과 강력한 대남 영향력 공작 전개가 예상된다. 북한은 한반도 안정을 볼모로 자신의 지정학적 존재감을 관련국들에 재각인시키면서 한미동맹을 강압하고 동맹국들의 지원을 각출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 도발 등을 감행하는 위기 고조 전술을 애용해 왔다.³¹⁾ 관련 국가 모두에 한반도 정세 불안정화라는 악성 위험을 강매하는 북한의 ‘위기 비즈니스’가 단지 어제, 오늘의 단편적 세일 행사는 아니다. 그러나 핵무력 확대로 자신감을 얻은 북한이 더욱 파급력이 크고 대담해진 도발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대남·대미 압박 목적의 핵능력 과시, 즉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신형 투발 수단 공개 등에 치중해 온 북한이다. 그 연장선에서 전술핵무기 폭발 실험, ICBM 정상 각도 발사 등 핵무력 고도화를 위해서라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도발 수단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선거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 즉 가시적 파급효과를 충격적으로 발산할

30) 중국의 위협천만한 지정학적 공조(?) 요구를 마다할 북한이 아니다.

31) 김진하, ‘북한 군사적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의 수정주의(Revisionism)적 기원’, 『국방연구』, Vol. 63, No.1, 2020, pp.1~26.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대규모 재래식 군사 도발이나 충격적 테러 등의 비대칭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재래식 도발의 확대재생산이나 2022년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선보인 대규모 미사일 발사 세례를 더욱 규모를 키우고 위협스러운 형태로 전개할 수 있다.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제재로 9.19 군사합의 일부의 시행을 유예한 한국에 대해 반발하며 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한 북한의 행태는 우발을 가장한 재래식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김정은도 “어떤 사소한 우발적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산될 수 있다”고 협박한다.³²⁾ 지난 2023년 12월 28일 국정원은 한국 총선 등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³³⁾ 마련을 김정은이 지시하였다며 경고를 발한 바 있다. ‘전쟁이나 평화냐’ 프레임 확산으로 한국 총선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여론을 조성하여 미 대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북·중·러 모두 미 대선 특정 출마 예상자에 대한 선호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위기 고조를 위한 무력도발 못지않게 선거를 앞둔 한국 내부 정치에 영향력을 투사하고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유발하기 위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 그리고 보이지 않는 침투 공작과 다양한 형태의 정치심리전을 전개할 수 있다. 2023년 암약하던 지하망 조직에 대한 일련의 검거 사건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한국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지 기반과 안정성을 허물기 위해 전개되어 온 북한의 다양한 영향력 공작과 남남 분열 작업 실태가 확인된 바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더욱 규모가 큰 대남 영향력 공작 및 정치심리전이 전개될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동시다발 테러,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연성을 가장한 대형 사건과 사고를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발 국제공조도 가능하다. 1월 대만 총통선거, 3월 (전시 상황으로 유예 가능성은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의 대선,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 등으로 촘촘히 잡힌 선거 일정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의 지정학적 이해타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즉, 한국, 미국, 대만, 우크라이나 등의 내부 정치 지형이 자국의 현상 변경 목표 추진에 유리한 환경으로 변경되기를 원한다는 점에서 북중러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도발이 진영 전체의 묵인,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공조하에 감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3년 11월 중국 정부가 관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언론사

32)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 12. 31.

33) 『동아일보』, 「김정은, 내년초 남한에 큰 파장 일으킬 방안 마련 지시」, 2023. 12. 28.

위장 가짜 뉴스 배포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되었다.³⁴⁾ 한국과 미국에서의 주요 선거를 앞두고 북한과 중·러 등이 가짜 정보 유포 확대 및 영향력 공작 효과 극대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설 수 있으며, 다른 유형의 진영 결속과 공세적 공조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요컨대, 선거 정치와 맞물려 무력도발과 결들여진 위태로운 ‘북한판 북합·하이브리드전’의 대담한 전개, 그리고 국제 현상 변경 도전 세력들의 한미동맹을 표적으로 하는 직간접적 도발 공모 또는 공조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더욱 험악해질 소지가 있는 국제정세, 그리고 선거 달력은 북한 대남전략의 극단화를 부추길 소지가 지대하다.

IV. 나가면서

김정은에 의해 직접 예고된 북한의 도발과 전투화된 대남전략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책은 무엇일까?

첫째,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 및 응징 태세 확립이다. 도발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응징은 당연하다. 현실성 있는 도발 시나리오들을 발굴하고, 대응 작계의 구체성도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의 의지와 준비 태세 확립을 명징한 형태의 신호로 북한과 주변국들에 전달하여 도발을 사전에 예방·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중·러에도 북한의 대규모 도발이 불러들일 수 있는 후과, 즉 한반도 정세 위기 고조 및 불안정 증폭 상황이 동북아 국제정치에 초래할 악영향을 명백한 신호 발신과 의사 전달로 사전에 인지시켜 북한 통제에 양국이 노력하도록 간접적으로 주문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북 핵 억제력 공고화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북한 핵무장이다. 북한은 확장된 핵전력이 제공하는 짙어진 핵 그림자를 배경으로 대담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도발-응징-종결>의 충돌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초래될 수 있는 핵 확산 (inadvertent escalation)³⁵⁾ 발발 위험성은 한국의 <단호한 대응과 응징>을 제약하는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김정은은 이미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³⁶⁾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

34)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합동분석협의체, 『중국의 ‘연론社 위장 웹사이트’를 악용한 영향력 활동 뉴스와이어 서비스 악용을 중심으로』, NCSC Report, 2023. 11. 13.

35) Barry R. Posen, *Inadvertent Escalation: Conventional War and Nuclear Risk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pp.ix-xi, pp.1-27.

36)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 12. 31.

따라서 대북 핵 억제력 구축이 관건이다. 우리 스스로는 물론, 김정은도 믿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대북 핵 억제력을 한국이 확보하게 될 때, 재래식 도발도 실효성 있게 억제하고, 도발 발생 시에는 효과적으로 응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킬체인 구축 등 독자적인 대북 억제 능력 향상은 물론,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 활성화, 그리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신뢰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의 신뢰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2022년 이후 한국 정부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실질성을 회복하고, ‘한·미안보협의체(SCM),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북핵 억제 관련 동맹협의체 기능을 활성화했다. 2023년에는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선언 등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신설이나 미국 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방문과 가시성 증진, 미국의 대한국 방위·확장억제 재보장 선언 등을 얻어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 시절 추락했던 미국의 방위공약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 후속 조치들을 구체화, 정례화, 세분화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을 ‘되돌릴 수 없는 제도화된 약속’으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확장억제 약속의 신뢰도를 제도적으로 확고히 하는 창발적 방안들을 발굴하고, 이를 신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고립주의적 축소와 후퇴를 지향하며 협의의 실용적 국익 추구에 방점을 두는 새로운 대통령의 등장 또는 소위 ‘트럼프 리스크’를 대비하는 데에도 필요한 조치다.

북한 핵무력 고도화 프로젝트의 이행 부진과 지체를 위해 대북 제재망의 정상 가동과 국제적 협력 강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 제재의 전반적인 강화는 어려울지라도 북한의 핵무력 확대를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이차 제재 및 한·미·일·유럽의 독자 제재 강화를 견인하기 위해 외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CVID 방식 비핵화 원칙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제재 실효성을 허무는 중·러 등의 국제질서 교란 행태를 규범적으로 제약할 필요도 있다.

셋째, 한국 총선과 미 대선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노리며 감행될 수 있는 북한의 대남 침투, 영향력 공작, 사이버 공격 등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군사 도발과 더불어 또는 별도로 전개될 수 있는 대남 정치 분열 및 혼란 조성 공작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민주 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론 통합을 위한 노력은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기초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우방국들과의 반침투·반공작 정보 및 기술 공유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제도화도 필요하다. 민주주의 공개 사회에 대한 디지털 전체주의 국가들의 도전과 침투가 점차 공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국가들의 공동 대응 노력은 당연하다.

북한은 한국을 동족이 아닌 적대 교전국이자 군사 정복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심지어 핵 선제공격까지 언급하며 한국을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위기가 목전에 도달했다. 그러나 북한의 비이성적 협박과 강압은 기실 체제 수호에 대한 내적 불안과 초조감을 방증하는 징후로도 볼 수 있다. 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대한 확신과 결의, 그리고 의연하고 현명한 위기 대처로 닥쳐올 한반도 위기상황을 오히려 통일을 향한 전기로 활용하는 지혜와 결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문헌

-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합동분석협의체, 「중국의 ‘언론社 위장 웹사이트’를 악용한 영향력 활동 뉴스와이어 서비스 악용을 중심으로」, NCSC Report, 2023.
- 김부성, 『내가 판 땅굴』, 서울: 갑자문화사, 1976, pp.59~60.
- 김진하, 「북한의 ‘핵위기·평화협정 연계전략’과 과도적 합의론의 도전: 한미 반(反)북핵 독트린(Doctrine)을 제안하며」, 『KRIS 창립 3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pp.301~343.
- 김진하, 「북한 군사적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의 수정주의(Revisionism)적 기원」, 『국방연구』, Vol.63, No.1, 2020, pp.1~26.
-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김한길, 「현대조선력사」, 서울: 일송정, 1983.
- 전봉근, 「북한 ‘핵보유국법’과 ‘핵무력정책법’의 비교 평가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2022-28, 2022.
- Anthony, Ted, *At UN, North Korea Says the US Made 2023 More Dangerous and Accuses It of Fomenting an Asian NATO*, AP, September 27, 2023.
- Bell, Mark S., “Beyond Emboldenment: How Acquiring Nuclear Weapons Can Change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40, No.1, July 2015, pp.87~119.
- DeBenedictis, Kent, *Russian “Hybrid Warfare” and the Annexation of Crimea: The Modern Application of Soviet Political Warfare*, London: I.B. Tauris, 2022, pp.31~54.
- Posen, Barry R., *Inadvertent Escalation: Conventional War and Nuclear Risk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1.
- Sagan, Scott D., “Armed and Dangerous: When Dictators Get the Bomb,” *Foreign Affairs*, Vol.97, 2018, pp.35~43.
-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36, No.4, July 1984, pp.461~495.

〈기사자료〉

- 『노동신문』,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2016. 5. 8.
- 『노동신문』,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2021. 1. 9.
- 『노동신문』,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2022. 9. 9.
- 『노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 1. 1.
- 『동아일보』, 「김정은,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 일으킬 방안 마련 지시」, 2023. 12. 28.
-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2023. 9. 28.
-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2023. 12. 31.
- 『조선중앙통신』, 「최설희 외무상 대적부문 일군들과 협의회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4. 1. 1.

〈웹사이트〉

- Lenin, V. I., “Report on the Tactics of the R.C.P.,” July 5, 1921, Third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June 22–July 12, 1921,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21/jun/12.htm>, 검색일: 2024. 1. 1.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eign Minister Sergey Lavrov’s Interview with TASS News Agency, December 28, 2023,” https://mid.ru/en/foreign_policy/news/1923539/, 검색일: 2023. 12. 31.